

# 국정신문

1998년 1월 12일 (월요일)

週刊 / 비매품

國政指標 / 新韓國창조

깨끗한政府 / 튼튼한經濟 / 건강한社會 / 통일된祖國

發行人 吳隣煥 · 編輯人 南廷判 · 發行處 公報處 政府刊行物製作所 / (우) 110-716 서울 종로구 도렴동 60번지 도렴빌딩 / 전화(02)733-5480(대)·733-5484(편집) FAX 733-5374

## ‘금모으기’ 범국민적 호응

# IMF 파고 함께 극복한다

일부 언론사와 금융기관이 시작한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장롱 속에 묻어두었던 금을 모아 수출함으로써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금융위기를 타개하자라는 이 운동은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을 받을 정도로 어려워진 우리 경제를 살리는 범국민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운동에는 벌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각 방송사와 신문사·기업체·시민단체 그리고 일반 가정이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 운동을 계기로 “힘을 모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금모으기 운동이 본격 시작된 것은 지난 5일. 금모으기가 국민적 공감대를 타고 확산되자 7일까지 3일만에 무려 1억7천여만 달러에 해당하는 17.7톤의 금이 매집창구인 주택은행에 모였다. 은행관계자들은 10일 현재 주택은행을 포함한 각 금융기관과 기업을 통해 모인 금은 모두 33톤, 3억3천만달러 어치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내무부의 경우 장관을 비롯한 직원들이 금반지 등 2만3천여달러 상당의 금을 모았고, 경기도·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참여했다. 일반 대기업의 모집창구는 장사진을 쳤고 어떤 운동선수는 각종 대회에서 상으로 받은 금붙이 1,200만원 어치를 내놓기도 했다.

### 외국언론 “한국인 저력 확인”

귀중하게 보관해 오던 아들딸의 돌반지 팔찌 목걸이 등을 꺼내 들고 은행을 찾는 서민들의 마음은 지극한 애국정신 바로 그것이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숭고한 자세다. 이런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밝은 장래가 있는 것이다. 외국언론들도 최근의 금모으기 운동과 관련, ‘위기 때면 단결하고 하나가 되는 한국국민의 애국심을 다시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하고, 고도성장이 멈출려 일하던 한국국민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운동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서글픈 것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위기를 의

면한 채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고, 여전히 향락에 빠져 있는 일부 국민들이 있다는 현실이다. 더구나 일부 부유층이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값비싼 양주를 마시며 흥청대고 있다는 보도는 우리를 분노케 한다.

### 경제주체 고통분담 뒤따라야

현재 우리 나라 각 가정에 소장된 금은 줄잡아 3천여톤, 3백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금모으기 운동이 보다 널리 확산돼 이번의 금융위기 극복에 실질적으로 큰 보탬이 돼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모으기 운동에서 보여주듯 IMF시대에 하루 속히 벗어나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은 이미 형성됐다. 이 과정에는 물론 큰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를 비롯한 기업 근로자 등 모든



### 金대통령 - 金당선자 회동

김영삼(金泳三)대통령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6일 우리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기업의 파감한 개혁과 구조조정이 조속히 단행돼야 하며 정리해고제도 실현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김대통령과 김당선자는 합의문에서 “우리 기업은 우리 경제를 이런 상황으로 만든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파감한 개혁과 구조조정을 하루속히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일랑기자】

경제 주체가 한 마음이 돼야 한다.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시대상황에 맞게 속히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때다.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작은 규모의, 그러나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조직개편에 착수했다. 여기에 기업과 근로자도 적극 협조하고 동참해야 한다. 기업은 스스로 과감하게 혁신하고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근로자도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부를 믿고 정리해고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을 헛되게 않게 하는 일이다.

이제 전국민이 나서고 있는 이 애국정신을 이어가야 한다. 모두가 IMF시대를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기 위해 사심 없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

## 국정 이해의 폭 더욱 넓힙니다

국정신문은 문민정부의 마무리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유일한 ‘정부매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면개선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지면개선을 통해 국정신문은 정부의 목소리를 보다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 ‘언론보도-부처의견...’ 확대

국정신문은 정확한 정부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부정확한 언론보도를 바로잡는 ‘언론보도-부처의견은 이렇습니다’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 국정만평·해외언론 논조 게재

정부의 정책의지를 한껏의 그림에 담은 국정만평을 지난

1월1일부터 신설했으며 이번 호부터는 해외주요언론매체의 논조를 간추린 ‘외국언론이 보는 한국·한국인’을 신설했습니다.

### ‘절약만이 살 길이다’ 캠페인

생활 속에서 IMF(국제통화기금) 한파를 이기기 위한 시리즈 ‘절약만이 살 길이다’를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특집과 기획기사로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PC통신·인터넷 서비스 강화

이미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국정신문은 올해부터 지면에 게재되지 않은 기사 서비스를 통해 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4·5면 기획특집

한국인 시민의식

‘공무원 사학연금 특혜 투성이’

# 국민연금과의 산술적인 비교 무의미 가입기간 20년차이 수익비도 불합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각 20년간 보험료를 낸 가입자의 수익비를 비교한 결과 일반국민들은 1,706만원을 붓고 6,640만원의 연금을 타 수익비가 3.9인 반면 공무원은 2,304만원을 붓고 2억 5,633만원을 타 수익비가 11.1로 나타나 공무원들이 3배가량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1월5일자, 한겨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제도 도입의 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연금수급액 자체만을 산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

특히 위 기사에서 비교한 두 제도의 연금수익 규모는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을 15년으로, 공무원연금은 35년을 기준으로 분석해 놓은 결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생활을 위한 순수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연금산정 방법도 연금가입기간중 받은 보수액 정도에 따라 1~45등급으로 나눠 평균연금액의 최고 100%에서 최저 40%까지 받게 돼 있다.

그러나 1960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외에 퇴직금 보장 의미의 함을 지니고 있다. 이는 우수한 인력이 공직사회에서 책임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완이라는 점과 함께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안전판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경우 개인의 퇴직금과는 별도로 받게 되는 순수한 의미의 연금이지만 공무원연금은 퇴직금의 개념이 포함된 연금이므로 두 연금의 성격은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따라서 두 연금제도의 취지와 성격은 접어둔 채 수급액만으로 단순히 어느 것이 유리하고 어느 것이 불리하다는 식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총무처 복지와 720-3628>

‘실업급여 기간연장 등 후퇴’

# 시간제·임시직 등 지급 보류한 일 없어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당초 180일(6개월)까지 늘리려던 방침을 150일(5개월)로 30일 단축키로 했다. 임시직과 시간제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려던 계획도 일단 유보하고 장기실직자에 대한 생계비·의료보험료·자녀학자금 지원방침을 백지화했다. <1월8일자, 동아·서울>

실업급여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노동부는 지난 6일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과 임시·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업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대책과 관련해 지난 7일 관련 부처 1급 비공식 회의를 개최해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실업급여 지급기간 단축과 임시직·시간제근로자 실업급여 유보, 장기실직자 지원 방침 백지화 등이 결정된 사실은 없다. <노동부 고용정책과 500-5575>

‘불법 근로자 조기출국 유보’

# 신고뎀 벌금면제... 출국유도 변함없다

법무부는 IMF 관리체제에 따른 실업사태에 대비해 불법체류중인 외국 근로자들을 조기 출국시키려던 방침을 유보키로 했다. 이는 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노동공백과 노동력 이동시간 등을 이유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출국조치를 오는 8월 이후로 늦춰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1월7일자, 국민>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조기출국 유보관련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노동부 등 경제부처로부터 외국 근로자에 대한 조기 출국 유보를 요청받은 바가 없다. 법무부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3월말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벌금을 면제해 주는 등 자진 출국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보관실:503-7011>

## 실업 종합대책

# 실업급여 최고 180일로 확대 벤처기업 창업 지원 일자리 늘려

노동부는 지난 6일 국제통화기금(IMF)환파로 올해 실업자수가 최고 1백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두 4조5,000억원의 고용안정기금을 조성, 실직자와 벤처기업에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실업사태 여파를 최소화하는 실업급여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실업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고실업기간 한시적 운용

다음은 실업종합대책 주요내용.

△실업급여 대폭 확대=현 재 30~120일 정도 지급하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60~180일로 최장 60일 연장한다. 이는 30~210일인 법정 실업급여지급기간을 고치지 않고 고실업이 지속되는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실업급여 적용대상 근로자는 1월부터 10인 이상 사업장, 7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각각 확대되며, 내년 7월부터는 임시·시간제 근로자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실직자 재취업·생계 안정=전직 실업자의 조기 재취업을 위해 실직자 재훈련 과정에 소정의 훈련수당이 지원되며 사무·관리직 출신 실직자가 창업을 할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 정도의 창업자금을 연 6%의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금년중 2,000개의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기업당 최고 3억원 창업자금 지원)함으로써 10만명분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외국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 내국인으로 대체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내국인으로 대체고용할 경우 환경개선자금 등을 지원한다.

△직업안전망 확충=선진국의 5분의 1 수준인 직업안전능력 제고를 위해 직업안전망을 확충, 약 10만명의 실업을 해소한다. 주요도시에 30개의 인력은행을 설치하고 노동사무소 등에 민간전문상담원 460명을 배치한다.

### 도시 인력은행 30곳 설치

△기업도산 예방=기업의 도산으로 30만명 이상의 실적이 예상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규모 확대,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의 자금소요 축소, 기업의 부동산 매각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방안을 통해 기업 도산을 최소화해 고용안정을 꾀한다.

△고용안정 지원=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근로시간 단축·임시휴업·인력재배치 등 직무분할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훈련비와 인건비 부담액 일부를 지원한다.

<선정철기자>



高총리 여성지도자 신년교례회 참석 한국여성개발원은 지난 8일 高建국 무총리와 여성계인사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지도자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高총리는 이 자리에서 “여성들이 오늘의 난국 극복을 위해 가정에서부터 앞장서줄 때 우리 경제는 빠른 속도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우동기자】

## 98년도 추경예산안

# 환율 등 영향 세출 8조원 줄여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이 최근의 환율폭등과 기업연쇄부도 등 경제여건의 변화로 8조원 이상이 삭감된 67조5,000억원 정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6일 '9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 올해 세수 부족분이 당초 예상했던 3조 6,000억원보다 △세입차질 3조6,000억원 △금융시장 구조조정 비용 3조6,000억원 등의 추가로 4조~5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을 8조

원 이상 삭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규모는 지난 해 국회에서 통과된 75조4,600억원(일반회계+특별회계)에서 4조4,000억원이 삭감된 71조1,000억원 안팎으로, 구조조정비용 3조6,000억원(이자지급분)을 합하면 실제 예산은 67조5,000억원 정도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종 사업비가 당초 예상액 36조4,130억원보다 7조원 이상이 줄어들어 예산규모는 지난 96년의 29조 5,110억원과 비슷해질 전망이다. <채>



정부 - IMF 4차 협의내용

# 경상 흑자·채무만기 연장 합의

## 성장률 1~2%·물가 9%선 억제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9일 오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국내총생산(GDP)기준 1~2%로 유지하고 물가상승률은 약 9%로 억제하며 경상수지 흑자추세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공동발표했다.

### 통화증가율은 14.9%로

또 통화의 경우 오는 3월말 현재 본인 통화증가율을 전년동기에 비해 14.9% 증가한 23조5,230억원으로 억제하고 한국은행의 순외환보유고(NIR)를 81억달러, 순국내자산(NDA)은 12조3,860억원을 각각 유지키로 합의했다. 정부와 IMF는 그러나 현재의 국내경제의 불확

실성을 감안, 오는 2월15일 거시경제지표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재논의 과정을 거쳐 각종 전망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IMF는 이날 워싱턴에서 이사회를 열고 우리 정부와 합의한 한국경제 프로그램에 대한 의향서를 검토하고 20억달러 규모의 4차분 자금지원을 승인했다. 다음은 양측이 합의한 경제프로그램 내용 요약.

△외화자금 조달노력 강화= 원활한 외화자금 조달을 위해 신속히 외국채권 발행들과 단기채무의 만기연장에 주력하고 신디케이트론과 채권발행을 통해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확대해 나간다. 또 향후 은행채권단과의 협정이

문제해결의 주요한 관건이 될 것임에 따라 한국정부는 만기의 충분한 연장을 원활히 하고 시장에서의 중기차입기회를 조속히 확보하기 위

해 다양한 형태의 협정을 고려할 의사가 있음.

△한은의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지원= 한국은행의 국내 금융기관 외환지원 통제를 위해 익일신용(하루물)을 포함, 만기연장이 안된 대출금을 지원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조속히 상환받도록 엄격한 지원자격 기준을 마련한다.

### 은행 지원사항 일일점검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조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한은은 은행의 지원요구사항에 대해 일일점검 및 사후 거래증명을 통해 검사를 강화하고, 동자금지원에 계속 의존해야 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유동

성이 떨어지는 외화자산을 매각해 나가도록 유도한다.

△금리 및 유동성 공급=단기적으로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고금리도 중요하지만 외화공급 확대를 통한 외환수급도 중요하다고 판단, 이자율을 점진적으로 안정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기로 함.

최근 은행권이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유지를 위해 자금공급을 축소, 건설한 기업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 한은을 통한 상업적 베이스에 의한 담보부수출금률 및 수출관련 원자재 등의 수입지원, 수출신용보증제도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재정=세수확대를 위해 교통세·특별소비세 인상 및 범위 확대 조치를 시행중이며 추가로 필요한 세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부문 구조조정=정부는 서울·제일은행의 BIS비율 충족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감자시기와 방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선주기자)



### 공공요금 결정 소비자 참여

## 원가 검증·서비스 개선안 제시

정부는 앞으로 전화·전기·철도·버스 요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 반드시 소비자가 참여해 원가검증과 서비스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서비스 공급업체의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요금조정을 신청할 경우 구체적인 경영합리화 계획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경제원은 최근 공공요금결정 과정에 소비자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원가 합리화는 물론 공급업체의 서비스개선, 소비자 만족 등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자율적으로 소비자 참여 활성화 방안을 추

진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재경원은 소비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대표를 포함한 민간인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소비자 주도의 공청회 개최 △요금 조정시 소비자대표, 회계·운영분석 전문가 등에 의한 원가검증을 도입한다.

또 지자체별 '물가대책위원회·우정사업운영위원회' 등 기존의 요금심의위원회에 소비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위원구성을 개편하고, 서비스개선방안 제시 등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대표 등에 의한 실질적인 원가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가분석자료를 공개키로 했다. <철>

### 은행법 개정법률공포안

은행업에 대한 인가권을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재정경제원으로 이관하고, 은행업무 범위도 재경원에서 정하도록 해 다른 금융업종과의 업무영역조정 기능을 일원화했다. 또한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은행의 영업소 신설·이전 등에 대한 인가제도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위원

회 입장시 6만 5,000원(외국인은 1인 1회 입장시 2,600원)으로 했다.

### 특별소비세법중 개정법률공포안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등유의 세율을 리터당 25원에서 60원으로, 석유가스는 킬로그램당 18원에서 40원으로, 천연가스는 킬로그램당 14원에서 4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이밖에 건전한 소비

### 국무회의 주요의안 (1월 6일)

## 은행업 인허가권 재경원에서 맡아 에너지 절약위해 등유 등 세율인상

회가 영업소 신설·이전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자를 중전의 금융통화운영위원회와 한국은행·은행감독원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개정령안

경마장·터키식당·투전기 시설·골프장 등에 입장하는 경우 탄력세(기본세율의 30%범위) 적용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그러나 카지노의 경우는 중전과 마찬가지로 세율을 1인 1

생활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과세대상 물품 중 골프용품·에어컨 등 제1종 물품과 고급모피 등 제4종 물품에 대한 세율을 30%로 높였다.

### 교통세법시행령중 개정령안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경우 이제까지 법률이 정하는 기본세율의 30% 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교통세법 개정예에 따른 기본세율의 인상 조정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國政 안테나

## 금융·외환위기 域內 국가간 협력 필요

○...지난 해 12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ASEAN 정상회담에 참석하였습니다만, 폐회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역내 각국의 안정과 번영이 상호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상호간의 경제협력에 우리 지역의 역동성과 번영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금융·외환위기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역내 국가들간에 상호 이해와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고건(高建) <국무총리, 제6차 아태회의포럼(APPF) 총회 축사>

## 경쟁력 높일 농촌경영의 틀 새로 짜야

○...우리나라가 IMF지원을 받게됨에 따라 농업자재가격 인상, 농산물 유통구조 왜곡에 의한 농가부담이 가중되는 등 농업분야도 커다란 시련에 봉착하고 있어 농업인과 농림공직자 모두가 이를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이 농산물 개방 파고와 IMF한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외국자재에 의존하지 않는 자원절약형 농업경영, 정부지원없이도 생존·성장할 수 있는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 등 농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틀을 짜야 합니다.

이효계(李孝桂) <농림부장관, 1월8일 전국농촌지도소장 교육특강>

# 한국인

## 시민의식 국제비교

# 준법·봉사의식 높지만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국민 의식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미진한 면이 없지 않다.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보다 이에 앞선 의식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개개인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한 의식수준과 행동양식을 보일 때 그 사회는 보다 풍요롭게 될 수 있다. 공보처는 오는 2002

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현재 우리의 공동체의식을 비롯한 △준법의식 △이웃과의 어울림 △사회봉사 의식 등 12부문의 시민의식에 대해 내국인 1,000명, 외국인 2,002명 등 총 3,002명을 대상으로 지난 해 9월부터 10월까지 선진 5개국과 비교·평가했다. 이 조사분석을 토대로 우리가 시민의식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 공동체의식

6개국 조사대상자들의 상대평가에서 미국인은 자국(51.3%)을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은 나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 스스로도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 한국인이 지니고 있는 공동체의식은 주로 개인 이익과 사적 관계를 중시하고 있고 사회집단이나 국가 등 큰 범주의 공동체의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공동체로서 함께 잘사는 원리가 확립되어야 함을 일깨우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개별적 생존원리에서 공동의 생존원리로 바뀌어야 하며 이익이나 사적 관계를 전제로 한 공동체의식보다는 공익과 공적 관계를 중시하는 공동체의식으로서의 지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준법의식

‘어려운 일이 생기면 뇌물을 써서라도 해결하려고 한다’는 문항에 대해 한국은 조사 대상국중 이탈리아와 함께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뇌물이라는 관행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공시설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준법실태와는 달리 준법의식에 대해서는 한국인이 6개국중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어 준법의식과 준법실태 간의 괴리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보다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와 ‘불편을 주는 법규라도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였다.

즉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차이가 너무도 크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높이는 교육훈련은 물론 이를 반드시 실행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이웃과의 어울림

이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나라는 이탈리아이며 한국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동네의 공식행사 참여’나 ‘동네에 문제가 생기면 적극 참여’ 등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은 점수를 보이지만 ‘동네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는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곧 한국인은 평소에는 이웃과 잘 어울리지 않으나 공식적인 일이나 문제 발생시에는 이웃과 함께 해야 한다는 당위적

지 예산 증액’에는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지만 ‘차선단체에 돈을 기부하겠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일본에 이어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사회봉사 의식을 제고시키고 사회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봉사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사회봉사 의식은 내가 베풀 수 있는 일부를 나누고자 하는 ‘섬김과 애정’에서 비롯된다는 생각과 함께 생활 주변의 작은 문제부터 자원봉사자들이 해결하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맛보게 함으로써 사회봉사 활동의 생활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화·타협의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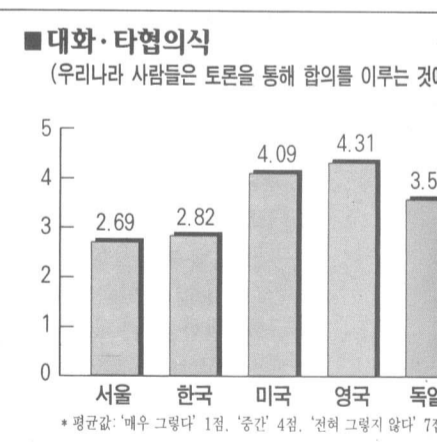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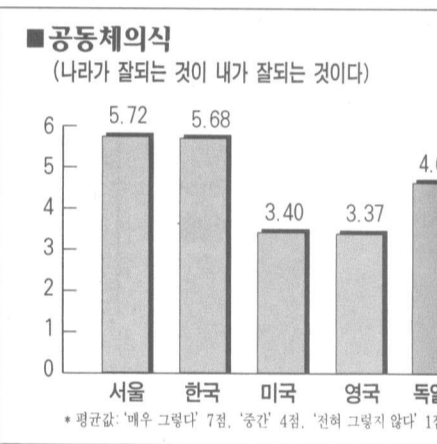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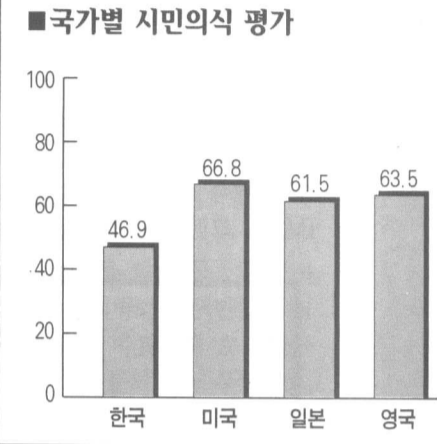
대화·타협의 실태 인식에 있어 일본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반해 한국은 각국별 상대국에 대한 평가에서도 이탈리아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세부항목 가운데 한국인은 ‘문제가 발생하면 대화보다는 힘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는 곧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와 타협보다는 권위와 아집 및 독선에 의지하려는 한국인의 특성을 엿볼 수 있는 항목이다.

한편 대화·타협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은 독일에 이어 영국과 함께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노사문제 등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해결시 대화와 타협을 좌악시키는 풍토를 추방하고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대화하는 습관이 체득되도록 해야 한다.



## 공동체 보다 개인이익 적극적

### ‘동네문제’ 관심... 이웃과는 잘 안어울려

의식이 상대국에 비해 높게 반영된 결과를 보여 주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전통적인 마을 단위의 지역공동체를 잃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웃사촌’의 정신을 되찾아 이웃에 대한 소속감과 공동체의식을 회복함으로써 질서있고 상부상조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의식 제고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깨달아야 한다.

### 사회봉사의식

한국은 ‘사회봉사’의 당위적 항목에 대한 지지비율이 6개국중 가장 높은 반면 개인적 차원의 봉사행위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세금인상을 통해서라도 사회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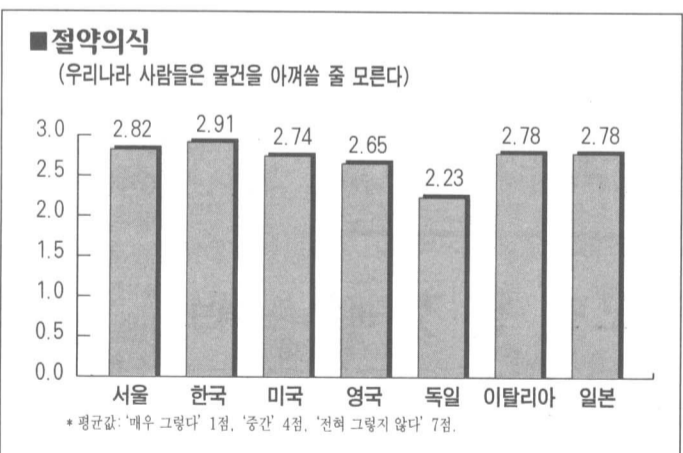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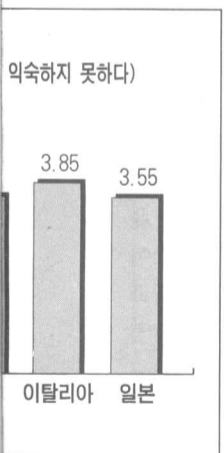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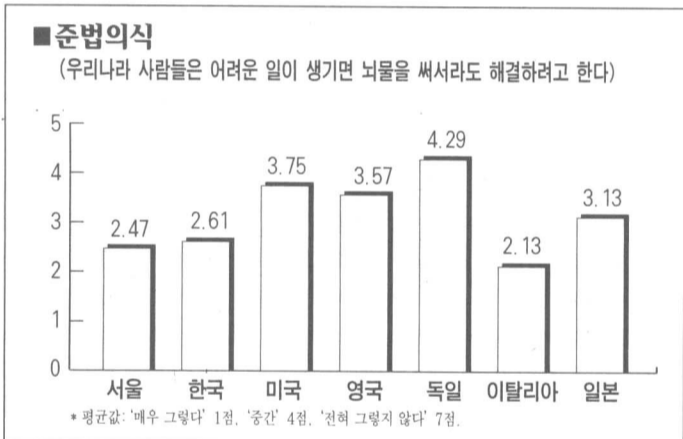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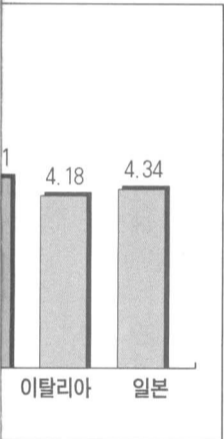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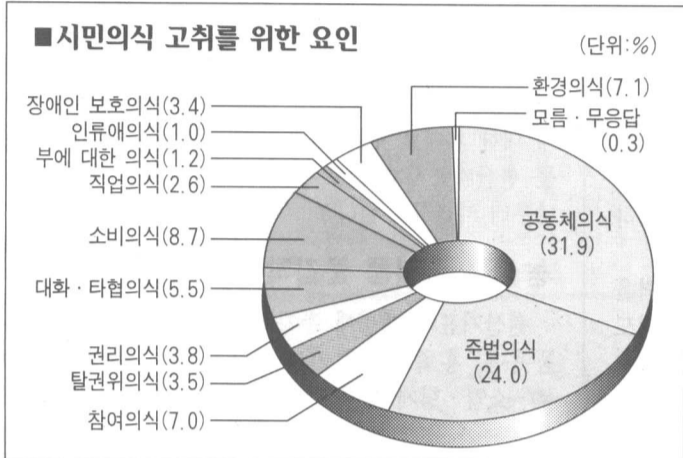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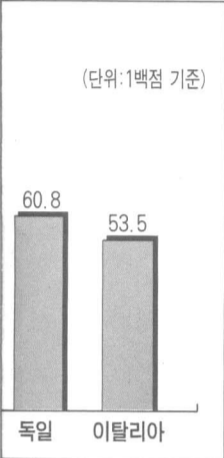
## ‘사회문제’로 인 개인적 권리 찾

### 권리의식

권리보호 실태 측면에서 ‘소수의 의견이나 권리도 존중된다’ ‘정부가 국민들의 권리를 잘 보장하고 있다’는 항목에 대해 영국·독일·미국 등은 높은 수준인데 비해 한국을 비롯, 이탈리아·일본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 실천 미흡



## 론에 글쓰기 노력 기는 소극적인 편

국가별 권리의식에 있어서는 한국은 영국과 함께 중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볼 때 한국인은 '사회문제에 관해 언론에 글을 써 보내려고 노력한다'는 항목에 대해 미국인과 함께 높은 응답을 보여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른 나

라에 비해 높은 반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한국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을 보여 포괄적이고 익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개인적인 수준에서 권리를 찾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국인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권리보호를 위한 노력은 제도의 구축 뿐만 아니라 시민 스스로의 의식개혁을 필요로 한다. 시민 개개인이 그것을 얻으려고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절약의식** 절약실태는 일본이 가장 높고 한국은 독일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한국은 특히 개개인의 절약의식은 높은 편이나 중고품 구입을 꺼리고 소비·지출 기록 등 계획성 있는 생활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가치관 혼돈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으로 근검절약이 값진 덕목임을 일깨우고 합리적·경제적 삶의 방식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검소와 절약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는 자원과 원료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업의식** 모든 국가들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독일이 가장 높았다.

한국인의 경우 직업선택시 수입보다는 '적성과 보람'을 중시하는 성향을 띠고 있는 것에 반해 '나는 나의 일을 즐기면서 한다' '내 직업에 대해 항상 자부심을 갖는다'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평가를 하고 있어 직업 만족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직업에 대한 당위적 태도와 현실인식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 절약해도 중고품 구입 꺼려 가족의 외국인과의 결혼 부정적 직업선택때 적성·보람 중시

**부(富)에 대한 의식** 사회 전반에서 배금주의 실태 전반에 대한 국가별 평균값은 시민의식의 다른 부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인다 가운데 한국은 배금주의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배금주의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밝히고 있고 '이 세상에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의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배금주의의 심각성은 부의 축적과정과 관련한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문항에 있어서도 한국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강하게 느끼고 있다.

깨끗하게 돈을 벌 수 없는 풍토에서 돈을 우상처럼 숭배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다. 돈은 더럽지만 돈을 숭배하게 된 우리의 갈등은 돈을 깨끗하게 벌 수 있는 풍토에서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돈을 버는 것 이외에 더 가치있는 일과 삶이 얼마든지 있고 돈은 그 가치들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외국인 의식** 외국 문제에 대한 관심과 개방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이며 한국은 일본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외국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였다. 한국은 분쟁지역에 대한 '평화유지군 파견 문제' 등 외국원조에 대해 적극적이거나 '가족의 외국인과의 결혼' 등에는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외국문제 및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낮은 인식수준은 각국의 상대적 평가에서도 잘 드러난다.

실례로 독일의 경우 이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로 영국(18.2%), 미국(17.5%), 일본(10.7%) 등을 꼽는데 반해 한국에 대한 응답으로는 단지 4.2%에 그치고 있다.

지구촌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근거없는 편견이나 무조건적인 모방을 벗어난 '열린 의식'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열린 사회'를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 보호의식** 장애인 보호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며 우리나라는 최하위 수준이다. '공공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나'라는 항목에서도 한국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같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부족과 함께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한국인은 장애인을 기피하는 성향이 대체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소외계층의 하나인 장애인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성숙하지 못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 부족은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그릇된 편견에서 비롯된다.

장애인도 사회 구성원이 갖는 권리와 기회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시책이 보다 더 강구돼야 한다. 장애인의 재활의지 제고를 위한 각종 행사에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계몽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환경의식** 조사 대상국 모두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은 편이며 특히 독일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심각하다고 느끼는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의 하나인 환경운동에 대한 관심도는 모든 나라들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한국 또한 전체적인 인식은 높은 반면 환경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문제는 인류 전체의 문제이다. 환경보전을 위한 가치관과 인식의 틀이 바뀌어야만 환경파괴가 줄어들고 환경투자가 증대될 것이다. 특히 건전한 환경의식의 형성은 적극적인 실천이 뒤따라야만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것이다.

(홍영모기자)

### 국정신문 캠페인

## 절약만이 살 길이다

삶의 지혜가 더욱 더 요구되어지는 요즘, △난방온도 낮추기 △한집 한등 끄기 △엘리베이터 닫힘버튼 누르지 않기 등 작은 것에서부터 절약을 실천하려는 불이 전국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모두 IMF(국제통화기금)한파'를 극복하려는 힘겨운 노력들이다. 무의식적으로 지나치기 쉬운 생활속의 절약테크를 기획시리즈로 엮는다.

### 실내온도 2도 낮추기

## 집집마다 실천만 한해 1조원 아껴

최근 들어 고혈압·심장병·뇌졸중 등 순환기 질환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질병 대부분이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높은 실내온도로 팽창된 혈관이 차가운 바깥 기온으로 급격히 수축되면서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 심장이나 뇌에 손상을 주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렇다면 인간이 가장 쾌감을 느끼는 실내온도는 얼마일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권장하

고 있는 겨울철 적정실내온도는 18~20℃.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난방습관은 적정온도를 웃도는 22~24℃에 길들여져 있다. 미국의 18.3℃, 영국 19℃이하보다 3~6℃ 높은 온도다. 실내온도를 높임으로써 건강을 해침은 물론 각 가정당 연간 5만4,850원의 연료비를 더 들이는 셈이다.

### 프랑스 옷겨입고 난방비 줄여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실내온도를 1℃ 낮출 경우 에너지비용이 5~6%이상 절약된다고 한다. 따라서 각 가정마다 실내온도를 2℃ 낮출 때 전국적으로는 연간 8,085억원, 최근 환율상승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을 감안할 경우 1조원 이상은 족히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또 에너지수입으로 지불해야 하는 30억달러의 외화도 절약하

게 된다.

독일이나 일본은 자녀들의 강인한 체력을 길러주기 위해 일부터 추운 환경을 조성하기도 한다. 프랑스에선 실내의 난방온도를 낮추고 스웨터를 끼입어 가정 난방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이제 내 주변부터 에너지 절약 습관을 길러보는 것이 어떨까. IMF한파는 가정에서 추위를 견뎌냄으로써 넘어설 수 있다. ■

### 원산지표시제도 개선

## 홍화씨·떡류등 품목29개 늘려

수입농산물이 국산농산물로 둔갑 판매되는 등의 농산물 부정유통으로부터 국내농업인과 소비자 보호 및 가공업체의 편의도모를 위해 원산지표시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농림부는 지난 8일 지난해 7월부터 농산물 수입이 전면개방됨에 따라 수입량이 증가하고 수입농산물과의 차별화가 필요한 국산 농산물 및 가공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품목 추가, 표시방법 개선, 표시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등 원산지표시제도를 개선,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 농산물 국산품 둔갑막아

원산지표시 대상에 추가되는 품목은 홍화씨·치커리·고본·소엽·형개 등 농산물 5개와 떡류·유가공품·이유식류 등 가공품 24개 등이다.

이로써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수입농산물 175개를 비롯해

국산농산물 148개, 가공품 105개로 늘어났다.

농림부는 가공업체와 판매업체의 원산지표시 편의도모를 위해 가공품의 경우 원산지를 '원료 및 함량'란에 표시하도록 돼 있으나, 표시면적이 협소해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포장 전면에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산물에 대해서는 풋말·인쇄·스티커에 의한 원산지표시 외에도 가격을 표시하는 라벨지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는 이번 원산지표시 제도 개선안의 조기정착을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벌칙을 강화, 농산물 및 가공품의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위반했을 경우 원산지 미표시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2분의 1을 부과하고, 2회 이상 적발됐을 때는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의 2배 이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선경철기자>

### 외국 언론이 보는 한국·한국인

세계화의 거센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더욱이 IMF자금지원까지 받게 된 우리는 이제 세계 속에서 세계와 겨뤄 이기는 민족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추스려야 한다. 세계라는 거울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호부터 주요 외신에 보도된 한국 관련 기사를 간추려 소개한다.

#### ■ 한국으로 부터의 몇가지 좋은 소식(12일자 미국·비즈니스 위크)

한국경제가 앞으로 다가오는 몇 달안에 개조될 것처럼 보이거나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것이다. 수많은 기업이 쓰러질 것이며 실업이 증가하고 주권은 외국채권자 및 한국기업을 인수한 외국인들에 의해 위협받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새롭고 더욱 활기차게 된 한국은 부상할 것이며 건강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안가 아시아의 모델이 될 것이다. 원화 및 주식시장이 폭락한 후 한국경제가 기능할 발판을 개혁하는 몇 가지 극적인 조치들이 단행됐다. 이윤없이 과중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재벌은 해체되어야만 했다.

금융시장이 한국에 가했던 그 충격이 이러한 과정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책임을 떠맡은 사람이 최근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대중(金大中)씨다. 그가 수출주도의 연고 중심경제를 개혁한다면 한

국 경제는 세계 속에서 더욱 강력하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한국 자산에 대한 100% 외국인 소유를 허용했으며 노조도 이러한 변화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 ■ 민주화투사에서 경제재건자로(8일자 일본·마이니치)

김대중대통령 당선자의 표정에는 그늘이 있다. 불행했던 성장과정,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정치력의 흔적일 것이다. 이러한 그늘은 친근감을 느끼게도 한다. 서민의 애환을 알고 쓴 맛 단 맛을

위대한 정치가는 때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지자를 배반한다. 김대중 당선자가 경제재건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거중의 공약을 과감히 버리는 것이다. 경제를 회생시킬 수만 있다면 국민은 약속위반을 용서할 것이다.

#### ■ 신뢰회복 조짐인 듯 투자자들 한국에 돌아오다(6일자 홍콩·아시아 월스트리트저널)

한국에서 외국인들의 투자가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이 국제지원과 정부개혁 덕분에 경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있는 조짐같다.

뉴욕의 은행들은 한국의 단기채 부담을 덜기 위한 갖가지 방법으로 채권발

재기에 나섰고 원화가치는 더욱 하락하여 국가부도위기를 맞은 것이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도 개혁의지를 밝혀 시장 분위기를 부추기는 데 일조했다고 분석자들은 말했다.

김당선자는 빠르면 이번주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시 정리해고를 가능케 하는 노동개정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할 것이다.

#### ■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한국의 금융위기(5일자 미국·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한국의 금융위기에 국제사회가 일치하여 대응해야 한다는데는 의문이 없다. IMF는 570억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민간은행들은 다같이 한국 금융기관들을 위협하고 있는 단기외채 부담을 줄여 주려고 하고 있다.

한국이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 및 민간차원의 이러한 노력들은 두가지 인식으로부터 기인한다.

첫째, 오늘날 세계경제는 재난을 피하고 주어진 상황에 적응토록 하기 위해 효율적이면서도 범세계적인 수단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사태는 그러한 수단의 쓰임새를 보여줄 적기가 도래했음을 알리고 있다.

둘째, 한국은 제3세계 경제권에 속한 아시아 국가들을 휩쓸고 있는 경제적인 동요와 일본과 같은 세계 일류 선진경제 사이에서 일종의 화재 방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는 소방대가 전원 합세하여 대응해야만 했다. ■

<자료지원 : 공보처 해외공보관>

## 한국경제 얼마안가 아시아 새모델 될 것 비즈니스 위크

### 외국인투자 활기 경제신뢰 회복조짐 AWSJ

### 金대통령당선자 소외계층 대변 진실담겨 마이니치

구별한 인물로 느끼게 하는 것이다. 김 당선자는 한국 사회의 소외계층을 상징하고 대변해온 인물이다. 소외계층에 대한 동정심에는 정치적 체스처 이상의 진실이 담겨 있다.

김당선자는 한국사상 최초의 진보적 생각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된다. 기성세대와 보수층은 긴장하고 있다. 그런데 김당선자가 최초로 한 것은 전·노씨 사면을 건의, 실현시켰고 정리해고제를 2년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었다. 그를 반대해 왔던 보수층은 환영하고 지지해 왔던 노동자들의 일부는 반발했다.

행, 정부상대의 직접용자, 시중은행 부채의 국제전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재경원에 따르면 한국은 외국은행들에 50억달러의 협조차관을 요청하고 있다.

외국자본이 계속 돌아올 경우 한국이 지난 달 IMF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 한국경제 위기는 겹잡은 은행과 외국투자자들이 재빨리 증시에서 돈을 빼내고 기업과 은행에 대출을 중단한 데도 원인이 있다.

이로 인해 생긴 금융위기와 원화가치 폭락으로 외채가 많은 기업들은 달러 사



달라지는 인사·후생복지

# 민간전문가 공직파견제 도입

## '5백만원 가계자금 대부' 신설

올해부터 민간전문가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일정기간(2년 이내, 필요한 경우 1년 연장) 공직에 들어와 일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제'가 도입된다.

또 공무원이 배우자의 해외근무나 유학·연수에 따라가기 위해 휴직을 원할 경우 3년 이내에 휴직이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총무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공무원의 인사분야 및 후생복지' 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 연구활동 임시휴직 가능

이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이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교사 또는 교수요원·연구원 등으로 일정기간 채용될 경우 이 기간을 휴

직으로 인정하는 '타분야 임시 채용 휴직제'도 도입된다.

또 전문직의 계약임용 채용대상을 연구·기술업무 분야에서 올해부터는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모든 행정분야로 확대하고, 여성채용목표제에 따른 여성공무원 임용비율을 지난 해 13%에서 15%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99년에는 18%, 2000년에는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 여성 임용비율을 15%로

이와 함께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시 가산점인정 적용범위를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세무직·관세직·감사직 등 5개 직렬에서 행정직·교육행정직·노동·공보·문화·사회복지·교정·보호감찰·철도·공안직군 등을 포함하는 15개 직렬로 확대했다.

아울러 변리사·공인노무사 등도 가산점을 인정키로 했으며, 가산점 비율도 종래 3%에서

5%로 높였다.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 확대를 위해 청장이 3급이상 공무원 임면제청시 주무장관을 경유토록 했던 제도를 없애고 처리결과만을 통보토록 개선했으며 연구·지도관인 소속기관장에게 임용권 위임시 총무처 협의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4급 공무원의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인사평정서'를 매년 1월말 총무처에 제출토록 했던 의무조항도 없애기로 하는 한편 △5급 공무원 승진방법(심사·시험) 변경시 총무처 협의 △7급이하 및 기능직 승진시험 방법 협의 △국제전문직 위 지정협의 △전문직 공무원의 국외출장 과정에서의 총무처장관 사전협의도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도 공무원 주택마련지원 3개년(98~2000년)계획이 시행되는 올해에는 무주택 공무원중 10년이상 근속자에게 3천세대를 건립 분양 또는 분양 알선해주고 1만 1,000여세대에는 자금지원을 해주는 등 총 1만 4,000여 세대에 대한 주택마련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생활안정자금 대부한도액도 인상, 전세자금의 경우 종래 1,300만원에서 2,000만원(서울지역)으로, 경조비는 300만에서 500만원으로, 자립지원자금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토록 했으며, 전세자금이나 경조비 등의 목적대부를 받지 않은 공무원을 위해서는 생활지원자금 형식으로 500만원(연이율 12%, 원리금균분상환 3·5년)을 융자해주는 '가계안정자금 대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선주기자)

### '98 대부한도액 인상 내역

대부종류	현행	조정	
전세자금	서울지역	1,300만원	2,000만원
	시 지역	1,000만원	1,500만원
	기타지역	700만원	1,000만원
경조비	300만원	500만원	
자립지원자금	700만원	1,000만원	

### 우편이용 리콜제

## 특급우편 늦으면 요금 반환 실비지급 맨 사서함도 무료

앞으로는 국내특급우편물이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배달되었을 경우 우편요금과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열쇠제작비만 지불하면 우편사서함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5일 우편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우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대상을 확대하고 손해배상금도 현실화하는 등의 우편관련 법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등기우편물에 한해 우편관서가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파손시킨 경우에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던 우편물 손해배상이 앞으로는 국내특급우편물이 약속시간보다 24시간 이상 늦게 배달되었을 때에도 납부한 우편요금과 수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리콜제가 시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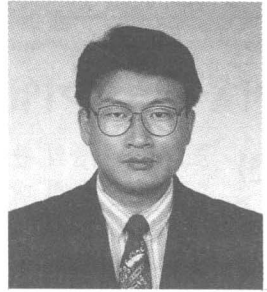
우편물 손해배상금액도 등기통상우편물은 5천원, 등기소포우편물은 1만원, 보험등기우편물은 최고 1천만원까지 배상했으나 이같은 금액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등기통상우편물은 2만5,000원, 등기소포우편물은 5만원, 보험등기우편물은 최고 2천만원까지 배상토록 대폭 인상했다.

또한 30kg까지의 다량·고중량 물건을 보내는데 편리한 우편자루 배달우편물도 앞으로는 전국 어느 지역이나 직접 수취인에게 문전 배달된다.

우편물 발송내용을 증명해주는 내용증명우편물도 앞으로는 용지의 양면사용이 가능하고 전체내용을 영어로 기재해도 된다.

(채수일기자)

### 이사람



**裴 馨 源** 사회복지전문요원  
군산시 선양동사무소

"제가 받는 월급은 국민이 내는 세금의 일부입니다. 이를 다시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적은 액수이나마 불우한 이웃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월급을 쪼개 장애인과 혼자 사는 노인 등 불우이웃을 돕는 지체장애 공무원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군산시 선양동 사무소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배형원(裴馨源·36)씨는 생후 8개월 때 소아마비를 앓은 3급 지체장애자로,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난 91년부터 박봉의 월급으로 지체장애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을 돕고 있다.

배씨는 현재까지 매월 봉급에서 20만~30만원씩을 떼내 불우이웃을 위해 쓰고 있으며, 독지가와 이들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 시에 거주하고 있는 소년·소녀 가장 1백명중 30명이 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7명에게 시가 15만원 상당의 휠체어를 기증했으며, 매월 라면과 쌀·김치 등을 구입

## 박봉털어 불우이웃 돕는 장애인 공무원

해 혼자 사는 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을 직접 방문하고 있다.

배씨 역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학을 졸업한 후 2년동안 직장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업체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는 설움을 겪어야 했다. 그가 한평생 불우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도 자신이 당한 이런 뼈저린 경험 때문이다.

그는 지난 87년 송실대 사회복지대학원에 입학, 장애인 직업재활 분야를 전공한 후 10개월간 PC통신 전자계시관을 통해 장애인 재활·취업 상담을 하면서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배씨는 "정부로부터 생계보조금을 받는 저소득층은 보조금만으로는 생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특히 최근 IMF 한파로 인한 물가상승이 그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지금 도움이 손길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배씨가 이렇게 얼마 안되는 월급을 쪼개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서는 그와 아내의 비상한 근검절약이 뒤따라야 했다. 그는 지금도 13평짜리 단칸방 월세 7만7,000원을 포함해 평균 생활비 20만원으로 한달을 빠듯하게 살면서도 저축은 꼬박 35만원씩 하는 자린고비 생활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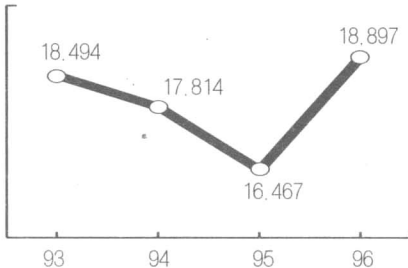
(선경철기자)

### 그래픽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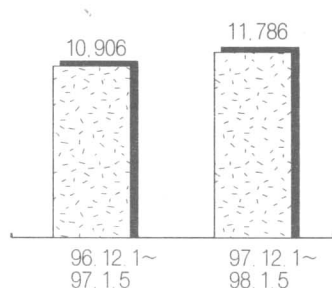
(불우이웃돕기 성금)

## IMF한파 불구 온정 밀물... 전년보다 8% 늘어

■ 연도별 모금실적



■ '96대비 '97중간실적



국제통화기금(IMF)한파로 경제사정이 더욱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기위한 성금은 지난해 보다 더욱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답지한 이웃돕기 성금은 모두 117억8,600만원으로 전년동기의 109억600만원보다 8.0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지자체 소식

#### 서울서 중소기업 판매기획전

〈대전〉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2회 대전·충남북 우수 중소기업 판매기획전이 3월 27일부터 3일간 서울 삼성동 무역종합전시장에서 열린다.

지난 해 5월 대전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된 1회 대회에 이어 서울 무역종합전시관으로 장소를 옮겨 열리게 되는 이번 기획전에는 대전지역 50개 업체 등 모두 1백50여 업체가 참가,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 행사에 벤처기업제품·생활용품·우수중소기업 제품 중에서 완제품 위주의 다양한 품목이 출품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50개 부스를 설치, 국내는 물론 외국 바이어를 위한 업체별 개별상담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오염 24시간 감시체제 구축

〈울산〉 울산시에 환경오염행위 24시간 감시체제가 구축된다.

시는 이를 위해 현재 환경보호과에 설치돼 있는 대기·수질 자동감시 장치를 시 당직실에도 연결, 야간에 발생하는 위반행위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대기·수질 자동감시장비는 배출허용 기준초과시 자동으로 부저가 울리도록 돼 있는 첨단장비로, 이 부저가 울리면 당직자는 환경보호과의 환경오염 상황판을 점검, 배출허용 기준초과 여부를 확인한 후 당일 환경감시센터 책임자에게 연락하고 책임자는 기동단속반원을 소집, 현장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환경기동단속반은 시와 구·군에서 2명, 낙동강 환경관리청 울산환경출장소에서 1명 등 모두 3명으로 구성된다.

#### 농가당 사료비 2천만원 지원

〈충남〉 기름과 사료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민을 돕기 위한 긴급 지원계획이 마련됐다.

충남도는 도내 사료값이 한달여 만에 34.4% 오르고 시설재배 농가의 면세유값도 무려 78%가 올라 추가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를 적극 지원키로 하고, 우선 축산농가를 위해 사료구입비 6백억원(농가당 2천만원)을 연리 5%, 1년 거치 2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하는 한편 사료작물 5천ha 재배, 톱밥발효기 1백대 보급 등 사료비 절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시설재배 농가에게 유류 구입비 224억원(10a당 220만원)을 같은 조건으로 지원하고 최근 농촌진흥원에서 개발한 유류 절약기술을 확대 보급키로 했으며,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어민들에게도 106억원의 유류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 춘천, 취로사업 실시 실직자 지원

〈강원〉 춘천시는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대학생 아르바이트난 해소를 위해 월동기 취로사업을 예정보다 앞당겨 12일부터 실시한다.

시는 당초 3월부터 시작하려던 취로사업을 기업체

부도 등으로 인한 실직자 증가 및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앞당겨 실시키로 하고, 1인 20일 기준으로 2만~2만3,000원의 일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다음달 28일까지 하천 및 제방의 잡초제거와 정비, 비닐 수거작업 등에 2,000~3,000명을 동원하고 3월부터 12월까지는 도로작업 및 공원 잡초제거 등 취로사업에 2만2,000여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각 읍·면·동별로 대상사업과 필요인원을 파악한 후 취업알선 창구(0361-250-3313)를 통해 희망자를 접수키로 했다.

#### 거제시에 해양민속촌 세운다

〈경남〉 관광객이 양식어류에 직접 먹이를 주는 체험 어장과 각종 어구 등을 갖춘 해양민속촌이 거제시에 건립된다. 오는 2000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추진될 해양민속박물관에는 모두 60억원이 투입돼 어구를 전시하는 실내전시관과 수족관·시청각실 등을 갖춘 해양민속촌 등이 들어선다.

해양민속촌에는 어민들의 그물 손질 모습을 관광객이 보고 직접 해볼 수 있는 야외작업장과 팔랑개 어장놀이, 각종 어로행위를 소재로 한 놀이마당도 꾸며진다.

시는 민속촌 인근에 관광객이 직접 양식어류에 먹이를 주거나 조개를 채취할 수 있는 체험어장을 조성하고 도서 낙도에 낚시촌을 만드는 등 종합해양관광 도시 개발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 나주에 '배 꽃가루 은행' 설치

〈전남〉 배 주산지인 전남 나주지역에 '배 꽃가루 은행'이 설치된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배의 원활한 인공수분을 위해 1억원을 투입, 꽃가루 채취와 정선·보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꽃가루 은행'을 오는 4월초까지 설치키로 했다.

꽃가루 은행은 개화 전의 배 꽃봉오리를 채취, 꽃잎과 꽃가루를 분리시키고 체로 걸러 보관한 뒤 배꽃이 만개할 때 배꽃에 뿌려 수분을 돕게 된다.

꽃가루 은행이 설치되면 나주지역 배품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신고' 350ha정도에 인공수분이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꽃가루를 적기에 싼 값으로 구입할 수 있어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자녀 위한 '툰툰이 흰눈학교'

송파구는 6일부터 자원봉사학생들과 협조해 거여·마천·풍납지역의 모자가정·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자녀의 학업을 돕기 위한 '툰툰이 흰눈학교'를 개설, 마천제2동사무소·풍납사회복지관에서 부진한 과목을 중심으로 한 개인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 종합청사개시판

#### 범띠해 맞이 민화특별전

##### 문화체육부

경북국내 한국전통 공예미술관은 98년 호랑이 해를 맞아

10일부터 31일까지 민화특별전을 개최한다. 이 전시회에는 그동안 전통민화의 맥을 이어온 서경식·정명숙·박영일·이형기·김순복·박순자·오영순씨 등 13명이 그린 까치호랑이·십장생·화조·모란·초충도·문자도 등 6백여점이 전시된다.

문의 734-1346

#### 1월 문화인물 '신윤복전'

국립중앙박물관은 13일부터 3월1일까지 조선후기 풍속화가 혜원 신윤복을 1월의 문화인물로 선정, 신윤복과 선조들의 서화세계를 조명하는 특별전을 갖는다.

이번 특별전에는 신윤복의 대표적 풍속화첩인 국보 135호 '혜원신진첩'을 비롯해 '미인도'와 '송정아회' '두 장담' '연당의 여인' 등 장르별 명품들과 보물 728호인 '설씨부인 권선문첩' 등

선조들의 서화명품 50여점이 전시된다. 전시기간중인 오는 20일에는 '혜원 풍속화의 감상'과 '고령 신씨 귀래정공파의 화맥'을 주제로 한 강연회도 열릴 계획이다.

문의 398-5134

#### 보호여성 긴급전화 개통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새해부터 24시간 여성전용 전화상담소를 개설했다.

이번에 개설된 1366번 전화상담소는 정부기관이나 여성단체 등 신뢰성이 있으면서 24시간 상근요원이 근무할 수 있는 곳을 지자체가 판단해 지정했다. 현재 설치된 기관은 서울을 비롯 여수·광주·울산·수원, 제주는 성폭력상담소, 청주는 가정법률상담소이며 부산·대구·포항 등은 청소년수련관이나 종합복지센터 등에 설치된다.

이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나 미혼모, 가출여성이나 윤락여성, 재해를 당한 모자가정 등 긴급상담이나 보호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전국 16개 시도 전화 권역에서 국번없이 1366번으로 상담할 수 있다.

'위기에 처한 여성'들은 상담을 거쳐

전문상담기관이나 여성복지시설을 안내 받고 필요할 경우 경찰지원과 의료서비스·구호 등도 제공받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여성전화상담소를 시범운영한 뒤 내년부터 14개 전화 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PC통신에 전산교재 올려

##### 총무처

총무처 정부전산정보관리소는 새해부터 공무원들의 전산 자기학습 기회를 늘리기 위해 PC통신 열린정부에 △윈도우 95 △한글 96 △엑셀 7.0 프로그램에 대한 전산교육교재를 올려 이를 전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들 자료가 필요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은 '열린정부'에 접속, 필요한 교재를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열린정부' 접속 및 다운로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열린정부' 통신망에 접속(모뎀접속 02-725-7711, LAN카드 152.99.1.1.) → 'GO CTC'를 입력 → 3. 전문정보/통신서비스 선택 → 4. 공무원 전산교육 → 3. 전산자기학습교재 → 2. 전산자기학습교재 자료 내려받기 → 원하는 교재번호를 입력한다.

문의 3703-3636~9

### 공공채널 K-TV

(케이블TV 채널14)

- ◆오늘의 국정(12일, 오후 5시30분)
  - △선진외국의 경제난 극복사례 △IMF시대에 달라지는 농업관련 주요 시책
- ◆숨은일꾼을 찾아서(15일, 오후 6시10분)
  - △절망을 딛고 일어난 소망 - 보건복지부 재할지연과에 임용된 2급장애인 조항현씨 소개
- ◆영상 어제와 오늘(16일, 오후 4시40분)
  - △그때 그 뉴스 △테마여행 △사건첩속의 추억 - 코미디언 조정현씨의 추억담
- ◆우리가락 우리춤(16일, 오후 8시30분)
  - △성주풀이:노래 성창순 등 7명 △아쟁산조:아쟁 이태백 △국악사랑방:우리소리 연주단체 △명인탐방:서도소리 보유자 황용주(I) △민요연곡:솔리스트 △연주곡:삼포가는길(다스름실내악단)
- ◆K-TV 시사토론(16일, 오후 11시10분)
  - △고용시장 불안 대책은 무엇인가? -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화합과 실질적인 고통분담 의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토론.